지역민들 분노에 사과성명 내고 지지 철회

鄭농림 지지 자치단체장 곤욕

정운천 농림수산식품부 장관 해임 반대 동의서에 서명한 지방자치단체장들이 사과 성명을 내거나 지지 철회를 밝히는 등 곤욕을 치르고 있다.

김충식 해남군수는 27일 '군민께 드리는 사과의 말씀'을 통해 "정치적 어려움에 처한 정 장관의 농정정책을 지지한다는 건의문을 국회에 제출하자는 화순군수의 제의를 받고 동의했다"면서 "해남 출신은 아니지만 해남에서 20여년간 사업을 한 정 장관과 함께 해남 농업을 살리기 위해 동의서에 서명했다"고 해명했다.

김 군수는 이어 "해남 군민의 대표로 행동하고 판단해야 한다는 것이 얼마나 어렵고 무거운 책임감을 느껴야 하는 지 가슴 깊이 깨달았으며 앞으로 군정에 대한 모든 현안을 군민과 논의한 뒤 신중히 처리해 나가겠다"고 강조했다.

김 군수의 사과 성명에도 불구하고 군청 인터넷 홈페이지 등에는 지역민의 분노가 수그러지지 않고 있다.

또 김 군수와 함께 서명한 박우량 신안군수에 대해서도 축산농가와 군의회, 지역민들의 비난이 일고 있다.

이채환 신안군의회 의장은 "군수가 정상적인 생각을 하지 못한 것 같다"면서 "의원들과 상의해 강력 대처하겠다"고 밝혀 정 장관 지지 성명 파장이 확산되고 있다.

정 장관 지지에 서명한 박병종 고흥군수도 고흥군 민주단체협의회와 한우협회, 농민회, 전교조 등의 반발과 사과 요구를 받고 결국 지지서명을 철회했다. 특히 축협조합장 출신인 박 군수가 쇠고기 수입 파동의 당사자로 꼽히는 정 장관 지지에 나섰다는 점에서 지역민들의 큰 불만을 샀다.

농민회원 등은 고흥군청을 방문, "쇠고기 협상의 책임자인 정 장관을 구명한다며 지지서명에 동참한 것은 농업과 수산업이 주업인 군민에게 충격이 아닐 수 없다"고 주장했다.

중국 쓰촨성 베이촨현 부근 탕자산에 생긴 언색호로 인해 수많은 집과 건물들이 물에 잠겨있다. 중국정부는 언색호가 무너져 또다른 참사가 생기는 것을 막기 위해 27일 폭탄으로 언색호를 폭파했다. /연합뉴스

"교과부 특별교부금 감사 청구"

전교조·시민단체 "국민 혈세 개인 용도 사용 공금 횡령"

전국교직원노동조합은 교육과학기술부 간부들의 모교·자녀학교 방문으로 논란이 일고 있는 특별교부금 문제와 관련, 28일 감사원에 감사를 청구할 것이라고 밝혔다.

교과부의 특별교부금은 특별한 국가시책 사안이 있거나 지역 교육 현안이 생긴 경우, 재난·재해 등으로 교육 지원이 필요한 경우 등에 사용하고 있지만 쓰임새가 공개되지 않아 장관의 '쌈짓돈'이라는 지적을 받아왔다.

전교조는 27일 "특별교부금을 교과부 간부들이 개인 용도로 사용한 것은 공금 횡령에 해당한다"며 "내일 오전 특별교부금 집행내역에 대해 감사원에 감사를 청구하고 집행내역의 세부사항이 공개될 수 있도록 할 것"이라고 밝혔다.

전교조는 국민감사나 일반감사의 경우 일반시민 수백명의 서명을 받아야 하는 만큼 사안의 시급성을 감안해 함께하는시민행동, 참여연대, YMCA, 흥사단, 참교육학부모회 등 공익감사 권리가 있는 시민단체와 함께 공익감사를 청구할 예정이다.

감사 청구 대상은 새 정부가 들어선 2월부터 교과부 간부들의 모교 및 자녀학교 방문 논란이 불거진 5월까지의 교과부 특별교부금 운용 실태와 장·차관 및 고위 관료들의 업무추진비 집행내역 등이다. 그동안 교과부 장·차관의 모교 방문시 격려금 지원이 관행처럼 이어져 왔으나 실·국장급 간부들로 범위가 확대돼 특별교부금을 지원한 것은 최근이라는 판단에서다.

교과부도 전날 "교과부 간부들의 학교 현장 방문은 27년째 계속돼 온 것이지만 예산 지원과는 관계가 없었고 예산 지원을 약속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라고 말했다.

이와 별도로 참여연대 등 시민단체는 교과부에 특별교부금 사용내역에 대한 정보공개를 촉구하고 특별교부금 제도 개선을 촉구하는 한편 김도연 장관의 사퇴를 촉구했다.

참여연대와 참교육학부모회는 논평을 통해 "장관이 책임을 지고 즉각 사퇴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한편, 교과부도 특별교부금 사용내역 공개를 놓고 시민단체와 법적 다툼을 벌이고 있는 상황에서 이번 사건까지 터지자 사용처와 지원절차의 투명성을 제고하기 위한 개선책을 찾으려 고심 중인 것으로 전해졌다. 교과부의 올해 특별교부금 예산은 1조1천699억원에 달한다. /연합뉴스

日정부 "독도 영토기술 여부 아직 미정" 한국에 입장 전달

일본 정부가 새 학습지도요령의 중학교 사회과 해설서에 독도를 '일본 고유의 영토'라고 명시할지에 대해 "기술 내용은 미정이다. 방침을 정한 사실이 없다"는 입장을 한국측에 전달했다고 교도 통신이 27일 보도했다.

통신에 따르면 일본 정부는 이날 열린 국무회의에서 채택한 스즈키 무네오 중의원 의원의 질의에 대한 답변서에서 이같이 밝혔다. 스즈키 의원은 정부에 대해 중학교 사회과 해설서의 영토 관련 기술 내용을 질의했었다. 문부과학성은 7월 중순까지 해설서를 작성할 예정이다. 제니야 마사미 문부과학성 사무차관은 "쓸지, 쓰지 않을지를 포함해 검토 중으로 명확히 말할 상태는 아니다"라고 향후 방침을 명확하게 밝히지 않고 있다고 교도통신은 덧붙였다. /연합뉴스

김정일 사망설 당국 "사실 아니다"

26일 한 때 북한 김정일 국방위원장의 사망설이 나돌아 언론사들마다 확인에 나서는 등 긴장감이 감돌았으나 정부 관계기관 당국자들이 모두 사실이 아닌 쪽으로 입을 모음으로써 간헐적으로 발생하는 각종 '김정일 유고설'의 하나인 것으로 정리됐다.

국가정보원의 한 관계자는 "언론사들로부터 김정일 사망설에 대해 많은 문의를 받았지만 사실이 아닌 것으로 안다"고 말했다.

청와대와 국방부, 외교통상부, 통일부 등 외교안보 관련 기관들의 관계자들도 '금시초문'이라는 반응을 보였다.

한 정부 당국자는 "여러 곳에 확인해보니 사실이 아니라는 반응들이었다"고 설명하기도 했다.

이와 관련, 북한의 조선중앙통신은 이날 밤 '김정일동지께서 조선인민군 제1727사관양성군부대를 시찰하시였다'와 '김정일동지께서 조선인민군 제836군부대관하 구분대를 시찰하시였다'라는 제목의 두 기사를 통해 김 위원장의 잇따른 군부대 시찰을 보도했다. /연합뉴스

中 탕자산 언색湖 폭파 방류

주민 13만명 대피…여진 피해도 확산

중국 쓰촨성 대지진으로 인해 형성돼 붕괴 위기에 처한 자연호수의 일부가 27일 처음으로 폭파돼 방류가 시작된다.

중국 당국은 인민해방군과 무장경찰 1천800여명을 동원해 이날 베이촨현 부근 탕자산에 생긴 최대 규모 언색호의 물길을 열기 위해 부분적인 폭파가 이뤄질 예정이라고 관영 신화통신이 이날 보도했다.

폭파에 앞서 26일 헬리콥터와 수송기로 굴착기와 불도저, 화물트럭 등 각종 설비가 공수돼 호수의 수위를 낮추는 작업이 진행됐다. 이에 따라 언색호의 수위는 전날 오후 가장 높았던 752m보다 2m 가량 낮아지면서 붕괴 위기는 모면한 상태다.

중국 당국은 이날 언색호의 지하에 매설한 다이너마이트를 터뜨리고 필요할 경우 폭격기를 이용한 공중폭격도 계획 중이며 굴착기 등을 동원해 배수 작업도 병행할 계획이다. 베이촨과 몐양시 등 인근 지역 주민 13만명은 대피해 만일의 사태에 대비하고 있다.

대지진으로 쓰촨 지역에 34개의 언색호가 형성돼 범람 또는 붕괴로 인한 대홍수 위험이 커지는 상황에서 중국은 탕자산 언색호의 배수를 마무리한 뒤 다른 곳에 대해서도 홍수방지 조치를 실시할 계획이다.

대지진이 발생한 지 2주가 지났지만 여진에 대한 공포도 줄어들지 않고 있다. 쓰촨성 칭촨현에서 25일 오후 발생한 규모 6.4의 강력한 여진으로 8명이 숨지고 927명의 부상자가 발생했다고 중국 정부 대변인이 26일 공식 확인했다. 홍수 및 여진에 대한 위험이 커지는 가운데 인명피해 규모도 계속 늘어나고 있다.

중국 국무원 신문판공실은 26일 정오 현재 사망자가 6만5천80명이며 실종자는 2만3천150명, 부상자는 36만58명이라고 발표해 공식 사망자가 처음으로 6만5천명을 넘어섰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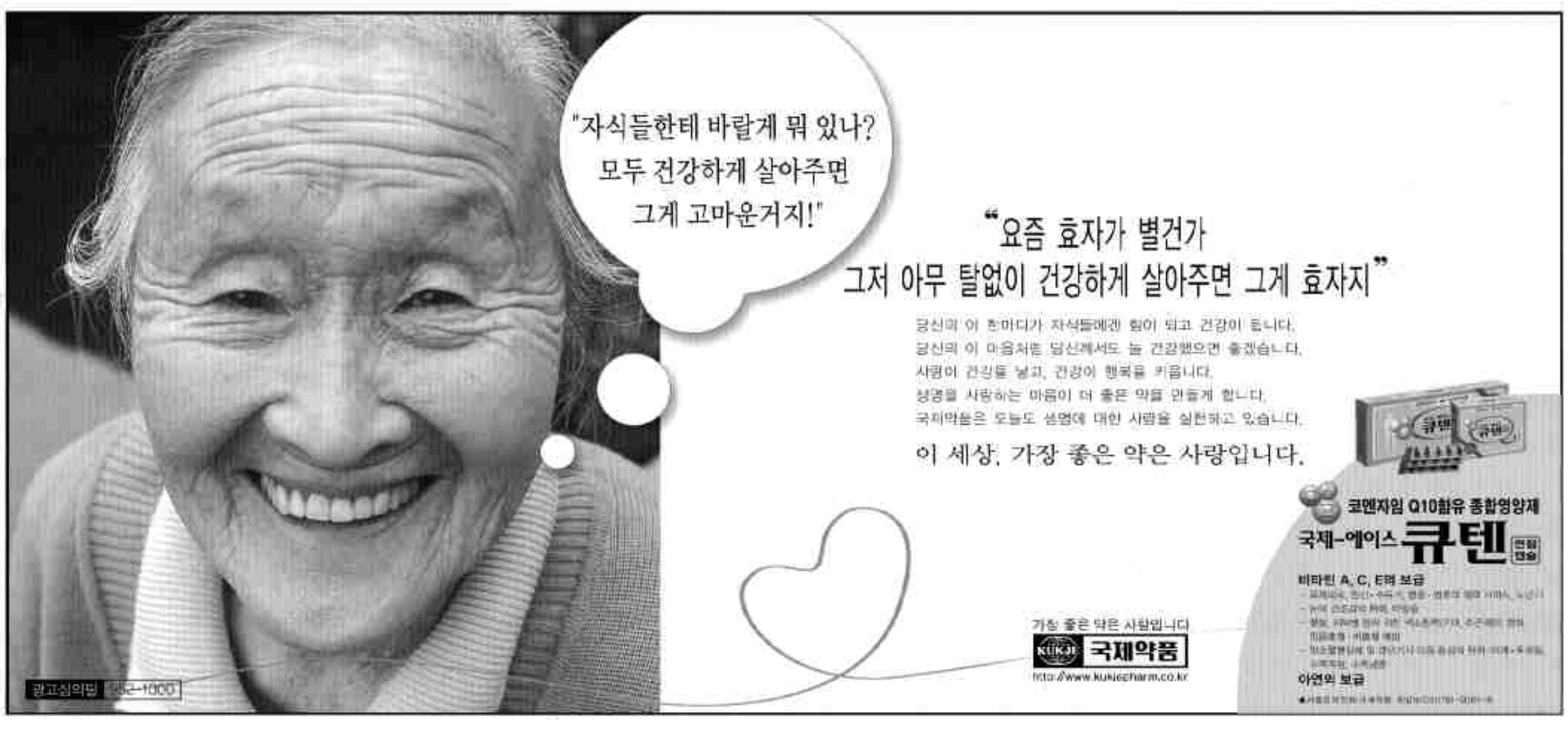
그러나 원자바오 총리가 24일 진앙지인 원촨 잉슈진에서 "대지진 사망자가 6만명을 넘었으며, 앞으로 8만명이나 그 이상까지 늘어날 수도 있다"고 말해 사상자가 더 늘어날 가능성이 높은 상황이다. /연합뉴스

6자회담 재개·일본인 납치 문제 논의

힐-김계관 베이징 회동

북핵 6자회담 북한측 수석대표인 김계관 북한 외무성 부상과 미국측 수석대표인 크리스토퍼 힐 국무부 차관보가 27일 오후 베이징에서 북·미 양자 회동을 갖고 북한의 핵 신고 문제 등을 논의했다.

베이징의 외교 소식통들에 따르면 김 부상과 힐 차관보는 북한의 핵 신고 문제와 6자회담 재개 방안을 협의하고 6자 회담 진전의 걸림돌의 하나인 북한의 일본인 납치문제에 대해서도 집중 논의한 것으로 알려졌다.

힐 차관보는 26일 베이징으로 출발하기에 앞서 기자들과 만난 자리에서 김 부상과 지체되고 있는 북한의 핵 신고 문제를 중점 협의할 것이라고 말했다. 또 미국의 한 관리는 김 부상과 힐 차관보의 베이징 회동을 확인했다고 교도통신이 전했다.

힐 차관보는 "김 부상이 핵 신고서 초안을 갖고 오는가"라는 질문에 "그런 말은 들어보지 못했다"면서 "추가 논의만 하게 될 것으로 생각한다"고 말했다. 김 부상은 힐 미 차관보와의 회동을 전후해 6자회담 의장인 우다웨이 중국 외교부 부부장에게 직접 신고서를 제출할 가능성이 제기되고 있다. /연합뉴스